

한전, 협력사 지원제도 전면 개편 고품질 기자재·해외 공동진출 속도

인센티브 혜택 총 12개로 확대
계약보증금 면제 등 비용 지원
인증제도 신설·명판 부여 추진
공급사 평가기준 자체별 세분화
BIXPO 무대에서 우수 협력사 시상

한국전력이 전력기자재 공급망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공급사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16일 한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전력설비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기업의 자발적 품질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공동진출 기반 마련이 목표다.

핵심은 인센티브 확대다. 'KEPCO Trusted Partner' 브랜드 사용 우대, 품질 등급 가점 부여, 감사패 수여 등 기존의 5개 항목에 추가하여, 제도적 혜택과 재정적 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총 12개의 종합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먼저 ▲계약보증금 면제 ▲환경인증 비용지원 ▲공인인증시험 비용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전력 신사옥 전경. /뉴시스

또 공동 연구개발 과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우수기자재공급사인증제도'를 도입해 인증명판(KEPCO Star Supplier)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공급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전력설비 견학 등 소통 워크숍도 개최한다.

인센티브 확대에 발맞춰 우수공급사 선정 기준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기업

신용, 기술개발 노력 외에도 변압기, 개폐기 등 자체그룹별로 평가를 시행해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품질 등급 간 변별력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계약 규모를 고려한 적기 납품, ESG 경영 노력도 등 실질적 항목을 반영한 개선된 평가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번 정책이 기자재 품질 향상과 현장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국내 제조사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등 대규모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안정적 전력기자재 공급 기반 확보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우수 협력사에 실질적 보상을 제공해 고품질 기자재를 확보하고, 안전 중심의 전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우수 협력사와 함께 해외 송배전 시장 공동진출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9월부터 평가를 거쳐 10개 우수공급사를 선정, 11월 열리는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I 트랩’ 농가 보급 전 현장점검 박차

농진청, 6개 시·군 시범사업 진행

농촌진흥청이 '무인예찰 포획장치'(AI트랩)의 농가 보급을 위한 최종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16일 전남 보성 AI트랩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청장은 공병해충 관찰 재배지에 설치된 장치의 운영 상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인과 시군 담당자, 지방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과 기술 적용 효과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농진청이 개발한 장치는 유인 물질(페로몬)로 해충을 유인하고,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 분석해 포획한 해충 마릿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예찰 장치다. 올해 전국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전남 보성과 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제천, 충남 예산, 전북 부안이다.

관찰 재배지에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각각 포획할 수 있는 장치 3대와 환경 감지기 1대가 한 세트로 설치돼 있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트랩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환경정보를 수집, 유입된 해충의 방향 추적과 방제 시기 예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청장은 "장치는 기후변화로 돌발해충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충 발생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각 지역 관찰재배지에서 장치를 적극 활용해 해충 데이터를 자동으로 축적·표준화하면, 장단기 예찰과 분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동시다발적 해충 조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잡초, 향염·미백 화장품으로 재탄생

국립생물자원관

방동사니속 식물 추출물 연구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16일 '방동사니속' 식물에서 확인된 향염·피부미백 효능이 기업에 기술 이전됐다고 밝혔다. 이 추출물은 세안제 화장품으로 개발돼 이달 중 출시를 앞두고 있다. 방동사니속 식물은 우리 주변 도로변이나 보행자도로 틈에서 흔히 발견되는 식물이다. 강한 생명력으로 흙이 거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쉽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 잡초로만 여겨져 왔다.

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자생생물 유용성 검증 연구를 통해, 방동사니속 추출물이 피부 염증의 주요 원인인 산화질소(NO) 생성을 최대 90% 줄이는 것을 확인했다. 또 피부색을 어둡게 하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65% 이상 억제할 수 있다고 봤다.

방동사니속 식물 추출물이 피부 염증 완화와 미백 화장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지난 2022년 11월 국유특허로 등록됐으며, 화장품 전문기업



푸른방동사니. /뉴시스

썬풀코스가 2023년 5월 기술을 이전받아 방동사니속 추출물을 함유한 세안제 화장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이달 중 출시된다. 또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11월 13~1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메가쇼 2025'에서 전시된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성과는 흔히 보이는 잡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생생물의 가치를 밝혀 산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환불'

공정위, 85개 불공정 약관조항 개선
컬처랜드 등 10개사 연내·내년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이른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대거 손질했다. 최근 환불 요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16일 ㈜문화상품권, NHN페이코, 컬처랜드, 기프트쇼 등 10개 주요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환불·양도 제한, 부당한 수수료 부과, 계약해지·재판관할 조항 등 7개 유형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회원 탈퇴·비회원 구매·양도받은 상품권도 환불 가능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환불 보장 △결제수단이나 현금으로 환불 원칙 보

장 등의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일부 사업자가 환불 시 포인트나 캐시로만 지급하거나, 발행일 기준으로 환불 기간을 제한했던 관행도 개선됐다. 공정위는 "구매·충전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비자가 실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히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환불수수료를 '내부규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거나,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무시한 채 수수료를 부과하던 조항도 모두 수정됐다. 앞으로는 7일 이내 청약철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보장된다.

또 원칙적으로 상품권은 무기명 채권에 해당해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한 만큼, 일률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선물받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 조항도 삭제됐다. 다만 자금세탁, 현금강 등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제한은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과정에서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도 반영하도록 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은 5만원 이하는 90%, 5만원 초과는 95%, 포인트로 환불 선택 시 100%까지 보장된다.

문화상품권·컬처랜드 등 7개사는 연내 시행, 나머지 3개사는 자동환불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유형 상품권 시장은 2019년 3조 4000억 원에서 2024년 8조 600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티몬·위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 등으로 환불 요청과 분쟁이 늘어나면서,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1349건 중 74%(998건)가 환불 거부 관련이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의무화

환경부, 내년 1월부터 음료업계 적용

대규모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내년 1월부터 재생원료가 최소 10% 들어간 투명 페트병을 사용(생산)해야 한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연간 5000톤(t)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

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이달 중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를 마무리해 의무 사용 비율을 10%로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거·선별·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여

간 품질 검증을 실시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 사용에 따른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재생원료 수급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은 연간 1000t 이상 사용 업체로 확대된다.

김고용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촌의료 공백 해소 확대

농협중앙회가 농촌지역 왕진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농협은 지난 주말 경남 하동군 횡천면에서 농업인·주민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가 협력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찾아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사업이다.

행사에는 하동 도원한의원과 하동군민여성의원 의료진이 참여해, 양·한방 통합 진료를 비롯해 침 시술, 피부

질환 치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운영 현장에서는 협력 의료진과 함께 '농심천심 운동' 실천 결의가 진행됐다. 의료진들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감하며, 농업인 진료 활동을 통해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이광수 농협중앙회 농업농촌지원본부 상무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복지 증진이 필수적"이라며 "농촌 왕진버스 의료진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